

## 전북의 데이터 활용 수월해진다

도, 문화관광·농생명  
귀농귀촌 등 6개분야  
빅데이터 허브 본격화  
예산 10억원으로 구축

전북도는 문화관광, 농생명, 귀농귀촌, 전북물류, 지역경제, 재해정보 등 6개 분야 중심의 데이터를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북 빅데이터 허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 빅데이터 허브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5억원의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된다.  
'전북 빅데이터 허브사업'은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연계하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활용가치가 많은 지역 빅데이터를 광역(도) 단위로 수집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및 도민의 사업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 데이터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로서 보다 많은 데이터에 대하여 쉽게 접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행정 분야에서는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 빅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이 좀 더 쉽게 데이터에 접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가 활성화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하여 사례로는 '골드타입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및 소방차량 재배치'와 '제2차 전라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2018~2022년) 수립' 등이 있다. /김진성 기자

## 전북선관위, 6·13 지선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180억2,526만 원(선거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3.1%)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8,299만원, 선관위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대상인 아닌 36억 5,772만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2억 7,593만원 ▲교육감선거 29억9,786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6,622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22억3,138만원 ▲시장·군수선거 30억3,219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3억8,685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68억

3,479만원 등이다.  
도지사선거의 보전지급액은 송하진 후보가 11억5,351만원, 임정엽 후보가 11억2,242만원이며, 교육감선거의 보전지급액은 김승환 후보가 11억9,288만 원, 서거석 후보 10억839만원, 이미영 후보 7억9,658만원이다.  
또한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당선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지급 총액은 2억9,978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억1,694만원, 정의당 7,728만원, 민주평화당 7,199만원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총 1억987만 원(부담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9.5%)을 지급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계휴가를 맞아 지역 관광지 방문을 실시한 가운데 군산시 동국사를 방문해 종결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말 전북 유적·관광지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지난 11일 전북을 방문해 주요 유적지와 관광지를 둘러봤다.  
이 총리는 이날 군산 동국사와 선유도, 익산 미륵사지와 전주 남부시장을 돌며 여름휴가를 이용한 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함께 총리부터 솔선해 하계휴가와 휴일을 이용해 국내 관광명소를 찾는다는 취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적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를 방문한 이 총리는 주지 종결스님, 강임준 군산시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과 함께 경내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눴다.  
동국사는 200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2011년 동국사 소조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373점 일괄)이 보물 제1718호로 지정됐다.  
오후 일정으로는 익산 미륵사지(익산시 미륵사지리)에서 미륵사지석탑 등을 관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실업문제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는 청년몰이 있는 전주 남부시장(전주시 풍남문2길)을 찾았다. /뉴스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 지원 나서

전주시, 14억4400만원 투입 80대분 보조금 최대 1800만원까지

전주시가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가적 재난 수준에까지 이른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전기자동차 약 80대분 총 14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 기업, 단체 등의 전기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간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1차로 74대의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1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 전기자동차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작사별 영업소에서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본인이 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자동차 영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승용·초소형 등 18종으로 보조금 지원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3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차량 출고 날짜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현재 일반지역과 공동주택에 급속충전 59기, 완속충전 110기 등 총 169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일반지역에 급속 충전기 21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충전기 설치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게시되는 공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에너지전환과(063-281-2324)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10월 익산 개최 전국체전 북한선수단 초청 담보 거둬

익산시가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에 북한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나 담보상대를 거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선수단 초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전국체전에서 북한 선수 참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99회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 추진은 지난 4월 정현을 익산시장인 북한팀을 초청, 전국체전을 세계평화축제로 승화시키자고 첫 제안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의 북한팀 초청 결의안 국회제출, 전국체전 익산시 운영위원회의 초청 건의문 국회전달 등 공감대가 확산된 바 있다.  
또한 전북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북한선수단 초청을 비공식적으로 요청,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의 논의로 뒤로 밀리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